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6년 제 05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국회서 ‘박준현 방지법’ 촉구 기자회견...“피해자 떠나고 가해자 남는 스포츠계 현실”

일요신문 이동섭 기자

02

학폭 의혹→1호 처분→사과 거부→행정 소송, 박준현 처음으로 입 열었다...

스포티비뉴스 박승환 기자

03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접수 80.5% 증가...사건 처리 속도 개선

뉴스1 이상철 기자

04

올림픽을 포기한 대한민국...스포츠를 국가 전략으로 보지 못한 행정의 한계

내외뉴스통신 김두환 기자

05

운동하는 장애인일수록 더 행복... 생활체육 참여율 3명 중 1명

더인디고 이호정 객원기자



01

국회서 ‘박준현 방지법’ 촉구 기자회견…“피해자 떠나고 가해자 남는 스포츠계 현실”

일요신문 이동섭 기자

2026.01.27.18:16:49

사진=일요신문 최준필 기자

| 손슬 진보당 의원 “학폭은 이미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중대한 문제”

손슬 진보당 의원이 체육시민연대와 ‘박준현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은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스포츠계의 현실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키움 히어로즈 신인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폭 논란에 대한 공론화 및 관련 법안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손슬 진보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학폭은 이미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학폭과 관련한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서면 사과 명령 결정에도 가해자 박준현 선수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 의원은 “선수뿐 아니라 구단과 체육계가 함께 책임지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과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고 법안 발의를 같이 작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준현은 2025년 9월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박준현은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2025년 5월 박준현을 둘러싼 학폭 의혹 사건에 대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2025년 12월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 사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서면 사과 명령 처분(1호 처분)으로 심의 결과가 뒤집힌 셈이었다.



01

박준현 측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2025년 12월 ‘서면 사과’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박준현이 사과하는 걸 70일 동안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로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체육시민연대, 법무법인 태광 등과 ‘박준현 방지법’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다. 체육시민연대 측은 “학교폭력이라는 명백한 잘못에도, 야구 실력만 있으면 모두가 나서 지켜주는 한국 스포츠계 그릇된 관행을 규탄한다”고 했다.

학폭 의혹→1호 처분→사과 거부→행정 소송, 박준현 처음으로 입 열었다 "구단+팬들께 죄송"

스포티비뉴스 박승환 기자

2026. 2. 2. 00:03

사진=스포티비뉴스 가오송(대만), 박승환 기자

키움 히어로즈 박준현은 1일 대만 가오송 국제칭푸야구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박준현은 신인오리엔테이션과 스프링캠프 출국을 앞두고도 인터뷰를 고사해 왔는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준현은 키움의 유니폼을 입고 아직 1군 마운드에 서보지도 못한 루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유는 북일고 시절의 학교폭력 의혹 때문이다. 2023년 2월 같은 야구부 소속인 A군을 지속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준현이 집단따돌림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을 겪었다는 것이 A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박준현은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학폭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준현은 신인드래프트에서 당당히 키움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결정이 번복됐다. 지난달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학폭 행위 인정'으로 결과를 뒤집어버렸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박준현이 상대에게 '여미새' 발언한 것과 DM을 통해 'ㅂㅅ'라고 보낸 것을 근거로 들어 '1호 처분'을 내렸다.

1호 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상대 측에게 서면으로 사과만 진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인드래프트 직후 "땀땀하다"고 했던 박준현은 기한 내에 사과를 진행하지 않았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 손솔 국회의원, A군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잇따라 박준현 측도 입장을 밝혔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박준현이 '여미새' 발언을 한 것이다. 다만 이외의 부분에서는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박준현 측은 지난달 29일 '여미새'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당시 부모들 간에 사과를 진행했으며, 다시 한번 사과할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ㅂㅅ'이라는 DM의 경우 박준현이 한 것이 아니며, 작성자와 발송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준현 측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달 공식 입장을 밝힌 박준현이 그동안 줄곧 고사해왔던 인터뷰에 응했다. 대만 가오슝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박준현은 먼저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죄송하고, KBO 팬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현은 드래프트 직후 "떳떳하다"고 했던 것에 대해 "다른 표현들도 많았을 텐데, 그때는 안일하게 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뷰를 고사해왔던 것에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입장문과 마찬가지로 박준현은 '여미새' 발언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ㅂㅅ'이라는 DM은 부정했다. 박준현은 "서면 사과를 하게 되면,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될 수 있기에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 여미새라고 한 것은 맞지만,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대로 다 말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이번 사안의 핵심은 'ㅂㅅ'이라는 DM에 달려 있다. 박준현이 보낸 것이 맞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1호 처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박준현이 보낸 것이라는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면, 또다시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다.

기사 보도

03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접수 80.5% 증가…사건 처리 속도 개선

뉴스1 이상철 기자

2026.01.30. 15:34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리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80.5% 증가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0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리 대응 체계 변화와 2026년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체육인의 신고와 상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권 침해와 비리 신고 접수 건수는 1536건으로 2024년 대비 80.5% 증가했고, 상담 건수 역시 6597건으로 69.3% 늘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담 확대, 온라인 신고 채널 고도화, 초기 대응 강화와 함께 신고인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있다"며 "센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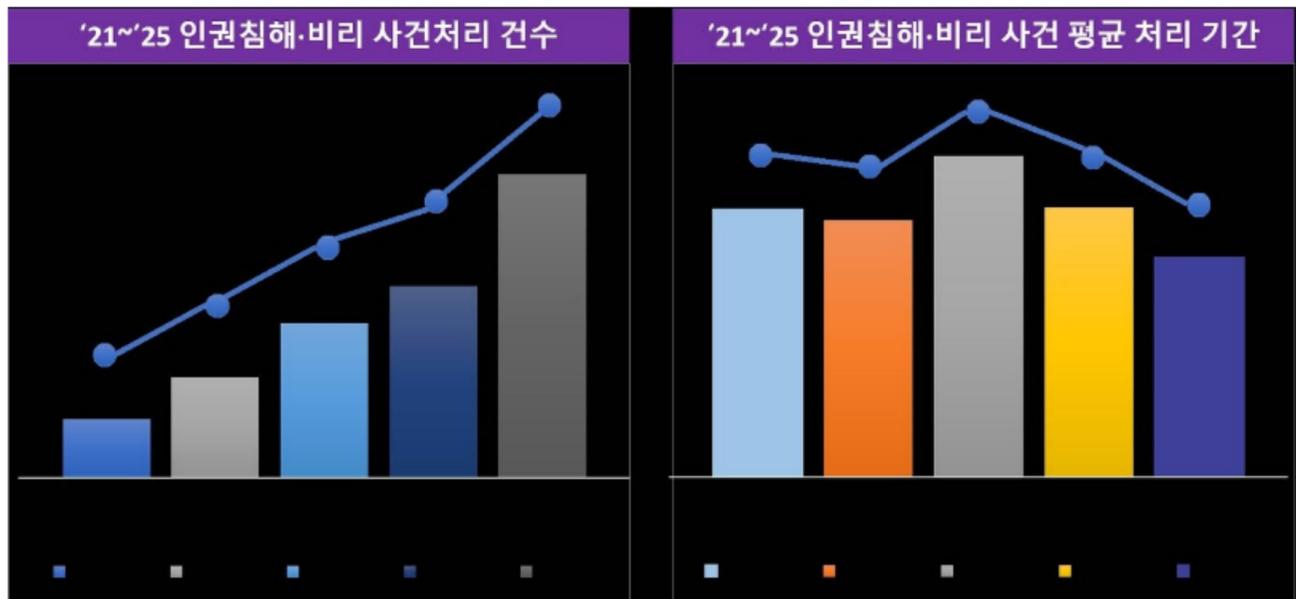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신고부터 결과 통지까지 조사 전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가명 조사 체계'를 전면 도입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신고가 급증했지만, 사건 처리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다.

지난해 사건 처리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 대비 65.1% 늘었으나 평균 처리 기간이 152일에서 122일로 30일 단축됐다.

기사 보도

03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리 신고 사건 처리 기간을 122일로 단축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여성 대상 성폭력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중대사건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이를 '특별조사팀'으로 정식 조직화해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법률, 의료, 심리상담, 임시 주거, 체육활동 비용 등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했다"며 "센터는 피해자가 일상과 스포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예방 중심 정책도 강화했다. 지난해 스포츠윤리 교육 이수자는 전년 대비 26.8% 많아졌다. 아울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상담·조사·결과 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징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체육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올해는 현장 중심 피해 예방, 중대 사건의 신속한 처리,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인권 보호와 공정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포기한 대한민국...스포츠를 국가 전략으로 보지 못한 행정의 한계

내외뉴스통신 김두환 기자

2026.02.01.15:35

사진=김두환 기자

| 올림픽은 이벤트가 아닌 국가 성장 플랫폼...사라진 국가 비전, 우리가 놓친 미래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분명한 정체성의 강을 건너고 있다. 저성장은 구조로 굳어졌고, 청년 일자리는 희미해졌으며, 지방 소멸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됐다.

정부는 정책을 쏟아내고 산업계는 해법을 모색하지만, 국민의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뒤집을 단 하나의 서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경험한 나라다. 그 이름은 스포츠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민이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숫자가 아닌 장면이었다. 땀 흘리는 선수의 얼굴, 경기장에 울려 퍼지던 함성, 패배 앞에서도 고개를 들던 태극기였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단순한 스포츠 성과가 아니라, 국가적 좌절을 밀어낸 집단적 기억이었고, 올림픽 무대에서 국기가 오르던 순간들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였다.

스포츠는 경기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과 국민 통합, 미래 산업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전략 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에 가깝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공식 출전식이 열렸음에도 대통령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고, 동계올림픽 유치 제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판단만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와의 전략적 논의 없이 거절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올림픽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 산업 활성화, 도시 인프라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 스포츠 과학과 기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종합 국가 프로젝트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천문학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치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올림픽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이벤트가 아니라 미래 성장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 부처의 판단으로, 그것도 국가 최고 전략 논의 없이 올림픽 유치 기회를 내려놓았다면, 이는 정책 실패 이전에 국가 전략의 실종이다.

전주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가적 도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조차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부담스러운 사업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스포츠 경쟁에서 스스로 퇴장하는 셈이다.

체육 현장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대표’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다. 지도자와 체육 행정가들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행정 조직의 결재선 위에서 너무 쉽게 지워지고 있다.

대림대학교 안을섭 교수는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본질적 한계를 이렇게 짚는다.

“우리 스포츠 행정은 여전히 예산 관리 중심의 행정 사고에 머물러 있으며, 스포츠를 외교, 산업, 국가 브랜드 전략과 연결하는 국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안 교수는 구조적 문제를 세 가지로 진단한다.

첫째, 중앙정부-지방정부-체육단체-산업계가 분절된 의사결정 구조의 단절.
둘째,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위험 회피 중심의 관료 문화.
셋째, 스포츠를 산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의 부재다.

해법은 명확하다. 스포츠 정책을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 직속 혹은 국가 단위의 스포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도시 개발, 관광 산업, 스포츠 테크 기업 육성과 연계된 종합 산업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위기,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스포츠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는 국민 건강과 사회 통합, 산업 성장과 국가 브랜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대통령의 아쉬움은 단순한 보고 누락에 대한 질책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구조적 행정 문화에 대한 경고다.

올림픽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는 도전한다.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굴러온 복을 걷어찬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을 다시 불러올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다.

기사 보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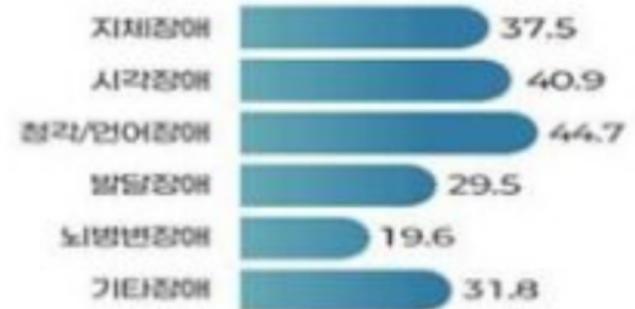
단위: %



*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신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노년변장애, 기타장애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05

운동하는 장애인일수록 더 행복... 생활체육 참여율 3명 중 1명

더인디고 이호정 객원기자

2026.01.29

사진=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주요 결과

운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일수록 삶의 행복감이 높다는 국가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비용 부담과 시설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월 28일, 전국 등록장애인 1만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조사는 통계청 국가통계승인 제113020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체육 참여율은 34.8%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참여율 수치는 ‘주 2회 이상(1회 30분 이상), 재활 목적이 아닌 체육활동을 집 밖에서 실천하는 완전 실행자’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3명 중 2명 이상은 정기적인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셈이다.

■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체육시설 이용률은 18.2%에 그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45.4%로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 이용 비율은 18.2%에 그쳤다.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17.1%, ‘시간이 부족해서’ 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가 38.2%, ‘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는 22.8%였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 문제를 넘어, 장애유형별 맞춤 지도 인력 부족과 접근 가능한 생활권 체육공간의 미비가 여전히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 보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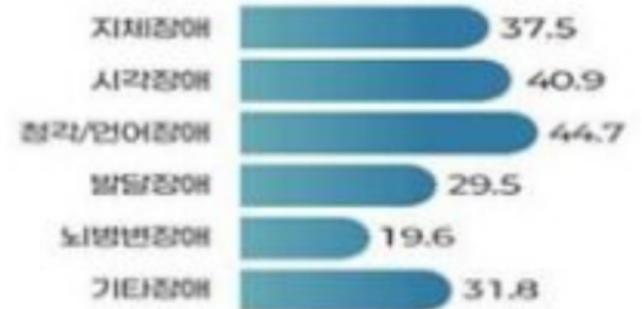
단위: %



*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설문조사: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방문 여부 여부, 1주일 2회 이상 운동, 1시간 30분 이상, 2백여명 설문조사 결과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05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 행복도 지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 행복도 지수

■ 생활체육 참여 높을수록 ‘행복감’도 상승... ‘가장 필요한 지원’은 비용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활체육 참여 정도와 행복감의 정적 상관관계다. 완전 실행자의 행복도 지수는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완전 실행자(3.33점)보다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가 단순 건강증진을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운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자, ‘비용 지원’이 34.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용 운동장비(15.5%), 생활체육 프로그램(15%), 편의시설 개선(12.8%), 전문지도(9.1%) 순이었다.

특히, 생활권 내 향후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유형으로 ‘공공 통합형 체육시설’ 선호가 33.7%로 나타나 전년 대비 4.9%p 증가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형 체육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부, 2026년 반다비 체육센터 지원 확대... “접근성 강화”

문체부는 2026년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용·프로그램 3대 축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금 증액이다. 개소당 지원금이 기존 30~4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확대되며, 2026년 신규 5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사 보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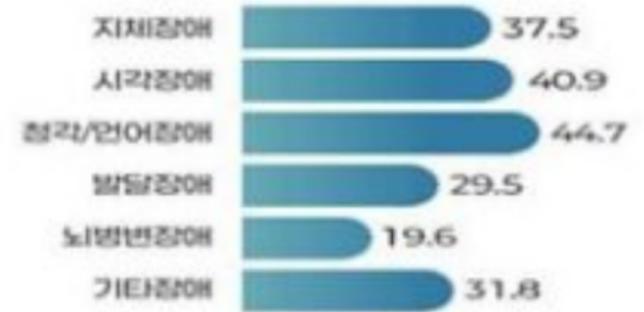
단위: %



*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지표: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장애유형 이외 특성, 1주일 2회 이상 운동, 1시간 30분 이상, 3번 이상 운동하는 자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05

또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 11만 원, 25,900명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966명 배치 ▲고령장애인 친화 종목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전국 운영 등이 추진된다.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체부(www.mcst.go.kr>주요정책>분야별 정책>체육)와 문화센터(stat.mcst.go.kr), 국가통계포털 누리집(www.kosis.kr)에서 2월 초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